

무안을 찾은 톱날꽃게에 대한 단상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최근 무안군의 한 횡집 수족관에서 우연히 톱날꽃게를 마주한 적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고급 음식으로 유명한 알리망오(alimango), 즉 톱날꽃게를 무안의 수족관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토종 꽃게와는 다른 생김새와 크기에 의아해하며 뜯어잡아보니, 그 정체가 분명히 톱날꽃게였다. 횡집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간혹 위판장에 잡혀 올라오는 이 녀석을 맛이 좋아 사들인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단순한 발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안군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처럼 느껴졌다.

톱날꽃게는 원래 동남아 맹그로브 지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1970년대 목재 수입 선박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와 낙동강 유역에 정착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도에 이어 무안에서도 발견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동해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톱날꽃게와 같은 새로운 자원으로 무안군 지역 농어업 구조를 다변화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무안군의 주력 작물은 양파다. 지역 농업의 중심축이었기 때문에, 무안 농민들은 오랫동안 양파 농사에 의존해 왔

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양파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무안군의 경제 구조에 큰 위기를 안겨주었다. 2024년 양파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양파 거래 가격은 kg당 1132원으로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 6월에는 산지 공판장 가격이 kg당 800원으로 전월 대비 250원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양파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기상 호조로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파 가격의 하락세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양파 농사에만 의존하는 무안군 지역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망고, 백향과, 오크라 등을 주요 작물로 삼아 아열대 농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생산부터 가공, 유통,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역 경제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한 모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안군도 이러한 모델을 벤치마킹해 변화를 꾀해야 한다. 양파 농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다변화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부산에서

는 톱날꽃게가 외래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맛 덕분에 '부산 청게'라는 상표로 특산물화시켰다. 이러한 어종과 작물을 발굴하고 지역 특산물로 브랜드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전통적으로 경작한 작물도 중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등장한 아열대 작물이나 톱날꽃게처럼 새로운 자원을 활용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농·어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연구에 매진해 새로운 작물 및 어종의 재배와 채취,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라는 의미의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다. 기후변화 시대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뉴노멀 시대이며, 무안군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변화를 향한 투자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날 미물인 톱날꽃게도 기온의 변화에 맞춰 해류를 따라 헤엄쳐 무안 땅으로 찾아왔다. 무안군도 이러한 큰 변화의 흐름에 맞춰 농어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지역의 미래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에 달려 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를 우리 농어업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 지혜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변화가 절실한 때다.

社說

꼼꼼한 설계로 최대 공약수 만들어야

윤 대통령 29일 연금개혁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급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연금의 가치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있다. 이번 정부의 개혁안을 계기로 공정하고 건강한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연금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와 함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남다는 경고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 종료 직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합의하고도 결국 타결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 사이 연금 재정 고갈의 우려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연금 개혁안 논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초 발표될 최종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쳐 21대 국회처럼 또 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연금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안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개혁은 결국 법률 개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 귀어인 감소 대책마련 시급하다

정주 여건 등 개선책 마련해야

전남 농어촌 소멸위기의 버팀목이었던 귀농·귀어·귀촌인 수가 매년 줄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남연구원(JNI)에 따르면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상 귀농은 전년 대비 1803명, 귀어는 288명으로 각각 9.3%, 7.4% 감소했다. 전국 감소율(16.7%, 26.7%)보다는 낮지만 동반 감소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귀촌은 7.1% 줄어 전국 감소율(5.0%)보다 높았다.

전남은 귀어인구 점유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는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귀농·귀어·귀촌인 수가 매년 줄고 있어 소멸위기도 더 빨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전남연구원의 이번 통계를 보면 전남 전체 인구 179만명 중 102만명(57.1%)이 농어촌인구다. 이는 전국 농어촌인구 비중 18.5%보다 3배가량 높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농어촌 인구 비중이 가장 크다. 전남 고령화율(65세 인구 비중)은 26.6%

로 전국 고령화율 19.5%보다 7.1%포인트 높다.

전남 고령화율의 경우 농어촌지역(33.0%)이 도시지역(18.2%)보다 2배가량 높다. 이는 농어촌지역에 젊은 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해 농어촌 소멸 우려가 커진다. 출산율 저하 등의 여파로 국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도시 취업자가 늘면서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5만 7547명) 중 농업(6752명)과 어업(9432명) 종사자는 1만 6184명으로 28.1%를 차지했다. 고령화에 이윤까지 부족한 농어촌은 외국인 노동 인력의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시에 지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농어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부적응 등으로 농촌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터 재정 인프라까지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귀농 생활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배우 청룡(성룡)이 2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성화봉송단의 일원으로 나서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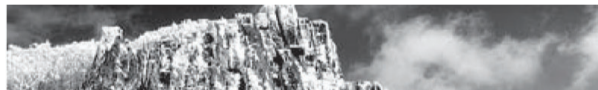
AP/뉴시스

서석대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임금의 창덕궁 흥복전에서 어전회의를 열고 8개 항으로 된 '한일병합조약'을 공포했다. 앞선 8월 22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3대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전권위원으로 체결한 '한국병합늑약'을 공식 확인한 것이었다. 구구절절 부끄럽기 그지없는 한민족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지금으로부터 꼭 114년 전에 일어났던 '경술국치'의 시작이었다.

나라 잃은 설움은 컸다. 일본은 을사늑약을 구실로 한국에 있던 외국 공관들을 모두 폐쇄하고 한국 정부의 외무부 격인 외무아문도 없애버렸다. 자주권은 물론이고 사법권과 행정권마저 강제로 빼앗아 갔다. 대한제국의 이름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국약무도한 일본은 우리의 글과 말을 빼앗았고,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도 금지했다. 이름마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서술 퍼린 총칼로 독립운동을 탄압해 많은 애국지사들이 형장의 이슬이 된 것도 주권을 잃은 나라의 슬픔이었다.

서술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이런 경술국치를 '영터리 문서로 밀어붙인 원천 무효의 조약'이라고 했다. '조약에 남겨진 불법과 강제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다 순종 황제



가 '한국병합조약'의 비준을 거부했고 황제의 친필 서명마저 위조한 세계 조약 역사상 유례가 없는 조약'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태진 저 끝까지 읽은 역사) 역사학자 정재정도 "마치 비상계엄 상태와 같은 삼엄한 경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언론과 출판이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은 그 사실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 (정재정 저 교토에서 본 한일통사) 고 썼다.

29일은 '한일병합조약'이 공포되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경술국치일이었다. 일본은 식민지배 기간 한국인들을 일

본인과 동화시키고, 일본 국민으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다. 강제 징용부터 위안부까지 성적 학대와 인권 침해도 극악했다. 그야말로 치욕과 분노가 점철된 폭력적인 시기였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경술국치 이후 지금도 대한민국이 일본을 매개로 반민족과 반역사적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독도 지우기가 횡행하는 것은 지금껏 친일 정산을 못한 우리의 업보다. 건국절로 독립정신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마저 인정하지 않는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역사관도 자업자득이다.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현실, 114년 전의 굴욕이 선연한 '경술국치의 날'이 원통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